올 여름 가장 더웠다

광주·전남 6~8월 26.1도 '역대 최고' … 더위도 한 달 빨리 찾아와

올해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기상 관측(1973년)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여름철 기후특성'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여름철(6~8월)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26.1도에 달했다.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은 지난해(26도) 기록을 0.1도 웃돌면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됐던 2018년(25.7도)보다도 0.4도 웃도는 수치다.

올해는 평년보다 한 달 가량 일찍 더위가 나타나는 이례적인 현상도 보였다.

6월 말부터 기온이 높아지기 시작해 2주 동안 광주·전남 일평균 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했다. 7월 9일 광주 조선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8.3도 이상으로 올라 한여름 날씨를 보였다.

이른 더위가 시작되며 광주(6월 19일), 완도(6월 20일), 고흥(7월 5일) 3개 지점에서 역대 가장 빠른 열대야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7월 하순과 8월 중하순에도 한밤중까지 높은 기온이 유지되면서 열대야 현상이 잇따랐다.

더위의 기세가 꺾인다는 처서(8월 23일) 이후에도 늦더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8월 하순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28.4도로 평년보다 2.4도 높고, 2024년(28.3도)에 이어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8월 25~27일, 30일의 광주·전남 일평균기온은 역대 1위에 해당했으며, 그 전후인 22~24일, 28~29일에도 역대 2위로 높은 일평균기온을 기록했다.

폭염일수(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른 날의 수)는 29.6일로 2018년 25.9일, 1994년 24.3일 기록을 뛰어넘어 1위를 기록했다. 평년보다는 22.3일 많았다.

열대야일수도 25.7일로 지난해(29.1일)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평년보다 14.6일 많았다. 특히 목포는 평년(16.3일) 대비 2.5배가 넘는 45일로 관측(1904년) 이래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일찍이 6월부터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고 대기 상층에서 고기압이 정체되면서 이른 더위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7월 하순부터는 티베트 고기압까지 한반도를 덮으면서 '이중 고기압'에 갇혀 기온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북태평양고기압이 일찍 확장한 이유로는 열대 서태평양의 대류 활동이 강화된 점, 북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았던 점 등이 꼽혔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23.8도로 지난해(24도)를 뒤이었으며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한편 이번 여름 광주·전남 강수량은 697.9㎜로 평년(703.4㎜)과 비슷했으며, 강수일수는 27.9일로 평년보다 8.4일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7월 16~20일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 영향을 받아 광주·전남에 평균 2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다.

8월에는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구름대가 유입돼 함평과 무안에 1시간 최다 강수량이 100㎜를 넘었고, 중순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된 고온 다습한 공기와 상층 기압골에 동반된 찬 공기 사이에서 형성된 정체전선 영향으로 남해안에 많은 비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오토바이 멈추고 쉬어 가세요

무안에 이동노동자쉼터 개소… 여수·나주 이어 세번째
냉난방 시설·소파·냉장고 등… 상담실·교육실도 운영

오토바이 배달 기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사진〉가 무안에도 조성됐다. 여수와 나주 등 두 곳뿐이던 이동노동자 쉼터가 3곳으로 늘면서 이동 노동자들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따르면 전남서부지역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가 5일 무안군 남악에 개소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가 운영하는 쉼터는 대리운전 기사, 배달·퀵서비스 종사자, 환경미화원처럼 정해진 근무지 없이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업무 특성상 휴게 공간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노동자들은 이동 중 도로변이나 차량 안에서 간단히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고, 장시간 노동과 기후위기에 직면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부는 무안 이동노동자 쉼터가 노동자들의 휴식 공간 뿐 아니라 권익 보호와 안전 교육 공간으로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쉼터는 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되며 냉난방기와 소파, 냉장고, 자동안마기, 휴대전화 충전기 같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상담실과 교육실도 마련돼 안전운전 교육과 노동 상담, 산업재해 예방 홍보 등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다.

무안 쉼터는 지난 8월 20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 입소문을 타면서 현재까지 400명이 이용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배달노동자 쉼터는 총 147곳이다. 광주에는 거점 1곳을 포함해 총 34곳, 전남은 여수와 나주에 각각 1곳씩 모두 2곳이 운영되고 있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이동노동자들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지만 정작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동노동자들의 증가 추세에 맞게 순천·광양·고흥 등 다양한 전남 내 지역에도 추가 쉼터가 마련돼 노동권과 복지를 보장할 최소한의 장치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민주 김문수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90만원 벌금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고 적었다. 1심은 김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유지했다.

김 의원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3일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 케이블카 탈선 사고로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4일 경찰들이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스본 명물 '푸니쿨라' 탈선… 15명 사망

한국인 등 23명 부상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3일(현지시간) 언덕을 오르내리는 전차인 푸니쿨라가 선로에서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숨지고 한국인 등 23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와 포르투갈 SIC 방송 등에 따르면 부상자 중에는 한국인 여성도 1명 포함됐다. 이 여성은 상프란시스쿠 자비에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망자들의 신원도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포르투갈 국립응급의료원은 부상자 중 5명이 위독한 상황이며, 부상자 중에는 아동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사상자 중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고는 이날 오후 6시께 푸니쿨라를 고정하는 케이블이 느슨해지면서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건물과 충돌하면서 일어났다.

소셜미디어들에 올라온 현장 영상에는 승객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노란색 푸니쿨라 한 대가 선로 옆으로 뒤집혀 잔해와 연기에 휩싸인 모습이 담겼다.

영상과 사진에는 구조대원들이 사고 차량에서 승객들을 구조하고, 선로에 있던 다른 차량에서 승객들이 빠져나오는 장면도 포착됐다. /연합뉴스

시, 쓰레기장 후보지 위장전입 관련자 고소

경찰,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자원회수시설 사업 차질

광주시가 광산구 삼거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 전입 의혹〈광주일보 9월 3일 1·3면〉과 관련해 위장전입 혐의자와 입지 신청인을 모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광산경찰이 위장 전입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따른 후속 대응으로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위장전입자 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등록만 옮겨, 소각장 후보지로 삼거동이 선정되도록 동의 절차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동시에 입지를 신청한 당사자도 책임 소재를 물어 함께 고소할 방침이다. 위장전입 혐의자들과 공모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과 함께 신청서에는 불법사항이 생기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에서다.

이번 사태로 광산구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건립은 불가피하게 지연될 전망이다. 시는 사건의 사법적 판단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법적·제도적 검토를 통해 '조건부 재공고' 가능성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진행한 자원회수시설 3차 공모에서 신청 요건을 충족한 4개 지역을 심사해 최적 후보지로 삼거동을 확정했다. 당시 삼거동은 전체 88세대 가운데 48세대가 찬성해 응모 기준인 '부지경계 300m 이내 세대주의 과반 동의'를 넘어섰다.

하지만 일부 동의 세대주가 위장 전입 혐의로 조사돼 검찰 송치가 이뤄지면서 선정의 공정성이 흔들리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입지선정과 관련한 모든 후속 행정절차를 즉시 중단했다.

정현윤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은 시민 신뢰가 핵심"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